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10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 당 자	• 포용기반팀장 이진오 ☎440-2176 • 담당자 권미정 ☎440-217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중심의 10대 인권정책 선정
- 이행숙 부시장 주재,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보고회 열려 -
- 포용정책에 기반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3월, 위원회서 최종 확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2023년 인권 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권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 하고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행숙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이 직접 챙겼다. 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주재하고, 24개 시 인권정책 부서장이 참석했다.

인권정책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3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 시행계획에 ‘균형·창조·소통’의 민선8기 3대 핵심가치 를 담아 시민 누구에게나 친근감있게 다가서는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 시민소통담당관실 내 포용기반팀을 구성하고, 포용정책에 기반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통합 정책,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분야 정책으로 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오는 3월 20일경 시 인권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숙 부시장은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서에 “각종 현안사항과 시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은 총 66개 추진과제로, 그중 4개 과제는 완료됐으며, 62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추진목적

-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2022년도 인권정책 66개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 (이행상황) 4개 과제완료, 62개 추진 중
- 2023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10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비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조성		
가치	참여	포용	존중
전략목표 (4)	추진과제 (15정책 66과제)		
함께 하는 인권행정	1. 효율적 인권제도 구축·운영 2. 소통·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		(9개 과제)
인권문화 확산	3.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제고		(4개 과제)
취약계층 인권보장	4. 여성 5. 아동·청소년 6. 장애인 7. 노인 8. 이주민 9. 소수자 등		(28개 과제)
생활인권 증진	10. 안전한 도시 11.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12. 노동존중 도시 13.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14. 모두가 누리는 교육·문화 도시 15.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		(25개 과제)

2023년 인권정책 10대 중점 추진과제	소관부서
1. 인권업무 조직·운영체계 강화	시민소통담당관
2. 민·관 협력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	여성정책과
3. 아동학대 예방·보호	아동정책과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복지과
5.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정책과
6.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인구가족과
7. 자살 예방 환경조성	건강증진과
8.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노동정책과
9.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1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과